

보도자료**2010년 3월 10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문의 : 네트워크정책국 인터넷정책과장 홍진배(☎750-2730)
인터넷정책과 홍사찬 사무관(☎750-2731)**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****- 『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』 마련 -**

- 앞으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.
-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『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』을 마련하여 3월 10일 발표하였다.
- 이번 종합계획에는 △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, △공공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, △공공정보의 품질제고, 그리고 △민간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,
 - 공공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재정보를 안내하고, “민간 활용 지원센터”를 설치하여 공공정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,
 - 저작권 관련사항은 저작권위원회와 연계하여 지원하게 된다.
 - 기관이 직접 생산한 공공정보의 경우에는 국가안보나 개인 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고, 공공정보 제공 지침을 마련하여 정보제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.

- 고품질의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, 데이터 오류측정과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, 품질 인증을 통해 공공정보에 대한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.

- 또한 인터넷, 모바일, IP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각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일반 국민과 기업의 참여와 관심을 모을 예정이다.

- 최근 아이폰 등 스마트폰 시장 확대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신규서비스 개발이 급증하는 등 공공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,

 - ※ 공공정보 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약 10조원으로 추산(고려대, 2006)

- 이미 EU, 미국,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공정보의 높은 사회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다양한 개방·활용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,

- 국내에서는 민간에서 원하는 공공정보를 쉽게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, 공공기관의 의지 및 인식부족, 제도 미비 등으로 공공정보를 확보해서 활용하기까지가 어려웠던 게 현실이다.

- 오늘 발표된 정부정책에 대해 민간기업도 적극 환영하면서 종합 계획의 세부 내용들이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으며,

- 서울·경기 버스정보, 석유공사의 주유소정보 차단 등 최근 공공정보를 둘러싼 공공과 민간의 마찰과 혼란을 막아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였다.

※ 문의

방통위 인터넷정책과	홍사찬사무관	(02-750-2731, schong@kcc.go.kr)
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	장경미사무관	(02-2100-3596, kmchang@korea.kr)
문화부 디지털컨텐츠산업과	이성천사무관	(02-3704-9693, schun@korea.kr)
저작권산업과	표광종사무관	

※ 붙임

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(요약)

□ 추진 배경

○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개발 등을 위해 공공정보의 활용 수요 증가

- 특히 최근 **i-phone** 등 스마트폰 출시증가로 공공정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제공수요 급증

※ 공공정보 활용 기업(조사대상 : 700개) : '06년 21% → '07년 35.1% → '08년 41.7%

○ 공공정보를 개방하여 민간의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관련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 필요

⇒ 관련부처 공동으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계획 수립 추진 ('09.12~)

□ 국내·외 동향

○ (국외) 공공정보 민간개방을 위한 제도를 정비(공공정보재활용규칙제정 등)

- 자국의 대표포털을 통해 인구, 범죄, 건강 등 공공정보의 개방 추진

※ 미국(Data.gov, '09.5), 영국(Data.gov.uk, '10.1), 호주(Data.australia.gov.au, '09.9)

○ (국내) 공공정보의 디지털화는 활발히 추진된 반면, 민간활용은 미흡

※ 최근 공공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의 공공기관 차단으로 언론 등의 비난 증가

- 경기도 버스정보('09.12), 주유소 가격정보('10.2) 등

□ 문제점

○ 민간기업 등이 원하는 공공정보에 대한 소재파악 곤란

※ 기업의 69.1%가 공공정보 수집시 애로사항으로 '소재확인 불가'를 제시(KDB, 2008)

○ 행정·공공기관 담당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공공정보의 취득 애로

※ 정보제공 처리절차 부재, 저작권 문제 발생 우려, 사후책임에 대한 부담 등이 주요 원인

○ 공공정보에 대한 품질관리 부족으로 민간에 제공된 공공정보의 데이터 오류, 현행화 미흡 등 문제 발생

□ 추진내용(행안부, 문화부, 방통위 공동 추진)

○ 원하는 공공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재안내 서비스 강화

- 공공정보 안내·검색·다운로드가 가능한 종합창구 마련
(data.go.kr)

- 민간포털 검색엔진의 공공기관 웹사이트 접근 차단정책 완화

※ 검색엔진의 공공기관 웹사이트 차단정책 : 웹사이트 전체 → 접근차단 대상 폴더

○ 공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토록 법령 개정 및 지원 강화

- 국가안보,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정보를 개방토록 법적 근거 마련(저작권법, 국가정보화기본법 등)

- 법령개정 전에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공정보를 제공토록 기관협조 요청 및 국가정보화수준평가 등에 가점 부여
 - 공공정보 제공범위 및 방법, 저작권 관리 등 공공정보 제공지침 보급
 - 「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」를 설립하여 공공정보 이용신청 접수, 보유기관 연계, 저작권 문제 해결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
- 공공정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데이터 오류 측정 및 개선지원
- 공공기관의 품질관리 프로세스 성숙도를 심사하여 인증
 - ※ 공공정보의 데이터 오류율 6.7%(KDB,2009)을 민간수준(2%)으로 개선
- 공공정보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지원 강화
- 민간기업 등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정보를 활용토록 표준화된 접속 방식(Open API)으로 공공정보를 개방('10년 14개, '13년까지 100개)
 - 모바일, IPTV 등 신규 매체를 활용하여 교통·관광·의료 등 공공정보 응용서비스 발굴 지원
 - 민간과 공동으로 공공정보 활용 서비스 개발 경진대회 등 개최 끝.